

● 차세대반도체 등 인력양성
에 70억 원 지원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7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함께 7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산학협력 확산을 위해 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올해 공동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6개 사업에 총 9백43억 원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사업은 대학 이공계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산업 밀착형 집중교육과정이다. 방학 등을 이용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집중교육 형식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3년간 5천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기술은 융·복합적 학문을 토대로 하고 있어 대학의 기존 학과 체제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관련 교과목을 설치한 대학

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정부 산하 연구소 및 전문교육기관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들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하는데, 산업체는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 지원금의 20% 이상을 대응자금(현물 10%, 현금 10%)으로 확보해야 하며, 확보 비율은 선정 평가 때 반영된다.

분야별로 23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팀당 연간 지원 예정금액은 디스플레이 분야 5억 원, 차세대 반도체 1억 5천만 원, 차세대 이동통신 7억 원 내외이다.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2004년 12월 28일 발표)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공·사립대), 입학정원 감축(국립대)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년 지원이지만 연차평가를 통해 일부 사업팀을 탈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메머드급 산학연 총괄제
출범

산학연 협력의 불균형 문제

가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산학연 간 교류와 신뢰 확보를 토대로 대학교육혁신과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및 산학협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계-학계-직능별 단체-지역단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총연합회가 지난 5월 12일 공식 출범하였다.

산학협력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산업계 9개 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단장협의회 등 7개 학계 단체와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서울시산학협력포럼 등 10여 개 직능별단체와 지역단체를 포함한 총 26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연합회는 산학협력 주체 간 의견 조율과 정보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 매년 두세 차례 오픈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설명회나 기술혁신·기술산업화 우수사례 발표회, 지식재산권 관리포럼 등 총연합회가 추진할 수 있

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시행하게 된다.

어운대 고려대 총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각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해 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을 맡았다.

출범식에 이어 산학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총연합회의 첫 포럼에는 이병욱 전 경련 상무, 유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상 산업체 대표), 방재욱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김도연 서울대 공대학장, 김용세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이상 대학 대표),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 반장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단장(이상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부처별 대학설립 까다로워진다

정부 부처나 기관의 무분별한 대학·대학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대학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범부처 차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재로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빠르면 올해 안에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공적재원)에 의한 대학설립 시스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겉대기만 놓고 보면 정부 부처의 대학설립이 쉬워진 측면도 있다.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대학을 설립할 때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의원들에게 부탁해 입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학설립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용적으로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공적재원을 투입해 대학을 설립할 때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앞으로는 각 부처나 기관이 대학을 설립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성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 활용 가능성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범 부처 차원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 후에도 정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한지 4년이 지났을 때와, 이후 매 2년마다 한번 씩이다.

기존에 각 부처가 설립한 대학 및 대학원이 학사조직을 개편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이외의 부처가 자체 특별법·의원입법 형태로 설립한 대학 및 대학원은 2006년 5월 경찰대(경찰청),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과기부) 등 14곳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학원 과정을, 광주과학기술원이 4년제 학부과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학교인 한국농업전문학교도 일반대학인 한국농업대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의위원회 규정'(총리훈령) 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1급 공무원과 인력양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별 수요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인력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 대학 재정지원 ‘너무 부족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2배가 넘는 등 교육여건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1일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14개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액은 4조 4천8백80억 원으로 전체 대학재정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78.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45.1%), 일본(41.5%)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절반이 넘는 55%(2조 4천5백4억 원)가 인건비 및 시설비로 지출돼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단위 지원액은 1조 8천8백66억 원(42%)에 불과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대학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지원할 ‘실탄’은 부족한 셈이다.

GDP 대비 고등교육비 투자비율은 2.2%로 OECD 평균 1.4%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공부담 비율은 0.3%로 OECD 평균 1.1%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6천47 달러로 OECD 평균 1만 6백55 달러의 60%에 머물렀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액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왔다. 4년제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7.8명으로 OECD 평균(14.9명)의 2.5배가 넘었다. 주요 대학을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3명인데 비해 중국 칭화대는 9명, 일본 도쿄대는 10명, 미국 하버드대는 14명이었다.

등록금 의존도도 높았다. 국내 4년제 사립대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등록금 및 수강료 의존도가 69%에 달하는 반면, 국고 보조금은 4%에 불과해 미국 대학(19.6%)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영 평가지원과장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한정된 정부예산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및 민간의 대학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누리’도 통합 덕 봤다

국립대 4곳, 사립대 4곳 등 8곳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신규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18일 신규 누리사업단 8곳을 새로 선정·발표했다.

대형사업단에는 충남대, 충주대, 한동대, 호남대 등 4곳이 새로 선정됐다. 중형사업단에는 강원대, 동신대가 소형사업단에는 건양대, 부산대가 각각 선정됐다. 연차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2008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는다.

원래 대형 3곳, 중·소형 각각 1곳 등 5곳에 총 1백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각각 1개 사업단씩 추가 선정했다. 지난해 연차평가를 통해 삭감한 사업비 25억 원을 신규사업단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1차년도(2004~2005년)에 선정된 1백22개 사업

단을 포함해 1백30개 사업단에 총 2천5백억 원이 올 한해 지원된다.

BK21에 이어 누리사업에서도 국립대 통합 효과가 이어졌다. 강원대, 부산대, 충주대 등 이번에 선정된 4개 국립대 가운데 지난해 3개가 지난해 통폐합에 성공한 대학이다. 4월 말 발표한 2단계 BK21사업 선정에서도 지난해 통폐합에 성공한 부산대, 전남대가 크게 약진했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사업유지 조건으로 새로 추가하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 강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연희 누리추진팀장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여부와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분야에 중점을 뒀 평가했다"며 "대학 통폐합, 총정원 10% 이상 감축대학에 연차평가 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년도(2004~2005년) 사업 평가결과를 봐도, 77개 대학에서 1만 3백41명(국립대 4천4백85명, 사립대 5천8백56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누리사업이 지방대 구조조정에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가운데 13곳은 2005학년도 대비 10% 이상 정원을 감축했다.

선정된 사업단은 5월 22일 컨설팅을 거쳐 5월 30일까지 '사업비 세부집행 계획서'를 제출, 교육부장관과 성과협약을 체결한 뒤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4년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시작된 누리사업에는 2008년까지 총 1조 3천6백억 원이 투입된다.

● 올 2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380억 원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올 2학기에도 상당부분 덜어질 전망이다.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학년도 2학기에도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학자금 지원규모는 3백80억원, 1만 5천 명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별 지원금액은 매학기 등록금과 입학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 주며, 4년제 대학은 8학기, 2년제 대학은 4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액을 1년 단위로 월별, 분기별, 일시 등으로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신청자격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해 8월 중순경 각 대학별 등록금 납기일 이전에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 1학기 1만 2천 명, 3백19억 원을 포함해 총 23만 8천 명, 3천6백억 원으로 매년 지원 인원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 과기부, 대덕특구 해외특허 사업화 본격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해외특허 사업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대학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의 사

업화를 위해 특허자산 실사작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별로 사업화와 이전, 권리포기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부 등은 설명했다.

특기지원본부는 이를 위해 실사지원이 필요한 해외 특허권 1천83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지원대상 해외특허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학연구원 434건, KAIST(한국과학기술원) 379건, 원자력연구소 235건, 기계연구원 81건, 에너지기술연구원 54건 등이다.

과기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 등이 자체 선정한 전문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분석·평가·사업화 가능성에 따른 특허권 분류 등의 자료를 받아 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과기부 등은 특히 실사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권에 대해서는 SMK(Sales Material Kit.판매 기술서)를 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특허권은 국가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며 “향후 산업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로 연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사립대도 서울에 MBA 설립한다

지방 사립대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설립자 소유의 건물이나 땅 없이 임차한 시설로도 도시 중심지역에 경영전문대학원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을 텃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5월 3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달부터 시행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

추면 임차 시설로도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설립주체 소유의 교지 및 교사만 교육시설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 사립대 학교법인도 서울 도심에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무역협회, 한국능률협회 등도 사설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MBA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설할 경우 임차시설로도 사립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다른 대학원대학에 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원대학교 등의 형태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할 때만 해당되고, 기존 대학이 건물만 임차해 쓰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설립 난립을 막기 위해 임차할 경우 5년 이상 계속 임차해야 하고, 1년 치 임차료를 미리 확보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시 지역의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으며, 또 실무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기업체와 대학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겸임교원의 비

율도 전체 교수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교원배치기준’은 완화했다. 전문대학원 교원은 전문대학원에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학부(과)에도 배치할 수 있다. 이는 학부(과) 교수가 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 2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는 9월부터 1년제 MBA(경영학석사) 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45학점) 이수제도 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변기용 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영전문대학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유치, 영어강의 비율 확대 등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청, 각 대학 창업강좌 지원**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창업 관련 강좌에 총 3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지원되는 창업 강좌는 성공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특강, 1주일간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 등이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창업 강좌는 수업료의 50%까지 지원하며, 학기 중 개설되는 강좌에는 최대 800만 원을 보조한다. 희망 대학은 오는 9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 **정부 사학연금 부실 핑계 “그만해라”**

애초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된 구조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재정악화를 불러왔다는 정부 논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모 한신대 교수는 6월 1일 사학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관영) 주최로 열린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97년 IMF 이후 이자율이 급락한 것이 사학연금 재정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출발 때는 오히려 고부담 저급여 구조였

다”고 주장했다.

저부담 고급여 설계가 사학연금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는 논리는 그간 정설처럼 퍼져있었고, 정부는 2025년 사학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고부담 저급여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논리를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교수는 사채이자율을 이용해 1975년과 1985년, 2000년 가입자가 각각 20년, 25년, 정년퇴직했을 때 받는 수익비를 비교한 결과 사학연금이 출발한 1975년 가입자가 2.55로 평균수익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수익비 2.55라는 말은 1백 원을 내서 2백 55원을 가져간다는 뜻으로 1985년 가입자의 평균수익비는 3.95, 2000년 가입자는 3.73이었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인데, 이자율의 영향이라는 것이 김 교수 설명이다. 즉,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현재의 급여산정방식이 저부담 고급여로 평가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반대로 고부담 저급여로 된다는 것으로 그 기준을

김 교수는 9%로 계산했다.

김 교수는 “1997년 이전에도 저부담 고급여가 재정불균형의 원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가치로 평가되는 연금경제성은 이자율에 의해 좌우되는데, 정부는 이자율 하락이 연금재정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를 간과한 채 이자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부담금과 지급액 간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악화를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는 연금수익비가 총 평균 3.98로 저부담 고급여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10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고, 2025년에는 기금 고갈 사태에 도달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부담 고급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 대표단체 가운데 하나인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정 이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담률을 올릴 때마다 ‘설계 때부터 저부담 고급여’ 논리를 폈었지만 1997년 이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주장한 것은 결국 책임 떠넘기 기였음이 드러났다”며 “이제라

도 가입자 단체와 협의해서 서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교육 바우처제’ 확대 시행

농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친환경농업교육 바우처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바우처제도는 친환경농업교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원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력 교육제도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림부는 올해 바우처 교육비는 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3% 증가했으며, 교육기관도 지난해 5개 시범기관에서 농협대학, 상지대학교,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을 추가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향후 농업인과 바우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으며, 6월 하순경 시·도(시군) 업무 담당자, 11개 교육기관, 농업인 등을 대상으

로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09년까지 여교수 2백 명 더 채용한다

2009년까지 국립대에 여교수가 최소 2백 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 2학기까지 실시되는 ‘국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를 2009년까지 연장 실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6월 16일 밝혔다.

여교수 채용 목표제는 여교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에 여교수 정원 2백 명을 별도로 책정, 희망 대학에 배정하는 제도로 올 1학기까지 1백 80명이 임용되었고, 오는 2학기에 나머지 2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여교수 채용 목표제를 통해 2백 명의 여교수를 특별 배정한 결과 2003년 4월 9.2%에 불과하던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10.7%)를 넘어섰다. 그러나 사립대 18.2%는 물론 전체 평균 16.2%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대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8.1%인데 비해 우리는 57.6%로 꼴찌"라며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2백 명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대의 여교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양성평등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주요 보직이나 각종 위원회 참여 여교수 비율을 추가로 넣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년제 일반 대학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지난 90년 28.5%에서 2005년 36.8%,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도 13.0%에서 24.4%로 증가했지만, 전임교원 중 여교수 비율은 같은 기간 11.8%에서 16.2%로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 로스쿨, 원점에서 재검토

당초 2008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로스쿨 도입 발표 이후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로스쿨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철현 새 교육위원장이 로스쿨의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밝힌 때문이다.

권 의원은(한나라당)은 6월 21일 본지와 취입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한 것이며, 유럽 국가들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폐해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로스쿨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사학법개정으로 6월 임시국회가 과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06 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수능 부정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률안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등록금 관련 법안 줄줄이 국회로...

캠퍼스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의 학내 갈등이 1학기가 끝나도록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가운데 등록금 관련 법안들이 속속 준비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게 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 의원은 대학등록금 인상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이월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내용이었으나, 이번에는 제외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몇 퍼센트가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결과가 없어서 우선 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며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란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내 주고 졸업 후 취직이 되면 일정 수입 이상일 경

우에만 수입의 정도에 따라
값는 방식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
를 내다보고 있다. 당장은 9
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이월적
립금 규모에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학운영 수입총액의
50%까지만 이월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학기
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쪽보다 아예 사립학교법에 관
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등록금 분쟁 발
생 시 이를 조정하고 권고하

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성회비
의 원칙을 세우는 법안도 함
께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교육담당인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법 개정이 아
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쪽으
로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고등교육 재
정지원법’과 ‘장학지원법’을
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재정지원법’에는
특정 사업 방식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
니라, 대학이 확보한 학생 수
나 계열별로 필요한 적정 교
육비를 산출해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
다. 장학지원법 역시 학자금
제도뿐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이공계 지원 등 장학제도 전
반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좀체 대학 울타리를 넘지
못했던 등록금 문제에 정치권
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학 무상교육’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